

한미 기준금리 역전폭 0.5%p로 확대

외국자본 이탈·수출경쟁력 약화... 韓 경제 '비상등'

수출기업 514곳 경영영향 조사 48.4% '환율변동 심화' 꼽아

한국도 기준금리 인상 움직임 가구당 대출이자 18만원 늘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 파월 의장이 13일(현지시간) 금리를 0.25%포인트 올렸다. 한·미 기준금리 역전 폭도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느리게 가던 자전거(한국경제)'가 '높은 언덕(한·미 금리 역전폭 확대)'에서 역주행 할까 우려가 커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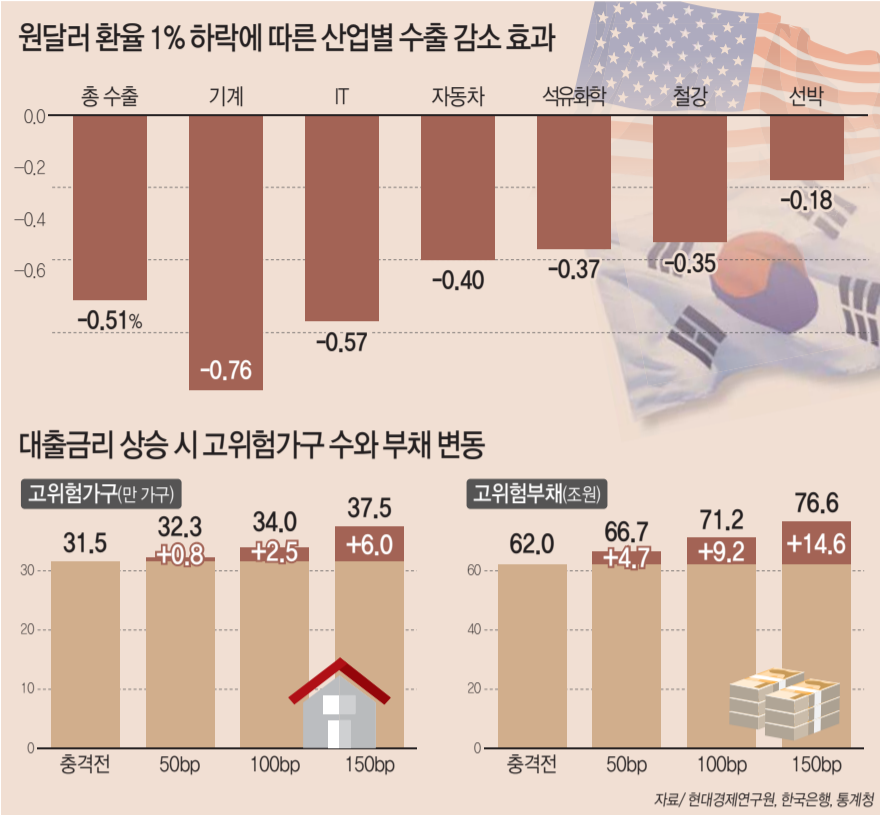
14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3월 산업생산은 전월보다 1.2% 줄어 26개월 만에 최대 감소폭을 기록했다. 설비투자 증가율도 대폭 하락했다. 믿었던 수출도 비틀대면서 4월 수출이 18개월 만에 감소했다.

전문가들의 전망은 한국경제의 체력이 다른 신흥국에 비해 튼튼한 만큼 큰 영향이 없겠지만 혼란은 불가피하다고 얘기한다. 한·미 금리가 역전되면 원화값은 비싸(수출 경쟁력 약화)지고, 1468조원(한국은행 1분기 말 기준) 규모의 가계부채가 한국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으로 다시 돈이 향할 경우 세계 증시에서 '플래시 크래시(flash crash·짧은 시간에 주가 급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도 있다.

◆ 한·미 금리역전, 외국인 발 빼나

한·미 금리 역전 폭이 0.50%포인트까지 확대됐다. 시장에서선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위기의 트리거(방아쇠)가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경험적으로는 큰 충격이 없었다.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6월~2001년 3월, 그리고 신용카드 사태 직후였던 2005년 8월



~2007년 8월에 한·미 기준금리 역전현상이 나타났다. 하지만 한국경제에 큰 충격은 없었다.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1차 역전 시기에 한국의 평균 경제성장률은 11%, 수출 증가율은 20%를 기록했다. 두번째 시기인 2005년 1년간 한국 경제는 5% 성장세와 10% 수출 증가율을 기록했다. 특히 2005년 7월 글로벌 신용등급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상향하고, 북한을 포함한 6차 회담 재개로 외국인 자금이 유입되면서 코스피가 상승 곡선을 그렸다.

하지만 자본시장에는 적잖은 영향도 줬다. 지난 3월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된 후

외국인은 3월 -4676억원, 4월, -1조3133억원, 5월 -2764억원의 매도세를 나타냈다. 최근 남북미 화해무드가 조성되면서 그나마 이탈이 줄어든 모양새다.

과거에도 비슷했다. 지난 2005년 한·미 기준금리가 역전되자 그해 7월까지 코스피 시장에서 2조원 가량 순매수하던 외국인은 금리 역전을 기점으로 8월부터 5조원 순매도로 돌아섰다. 이어 2006년 10조원, 2007년엔 24조원 이상의 외국인 자금이 이탈했다.

홍준표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연준이 올해 4차례 인상을 해서 한미 금리 차가 1%포인트가 된다고 하더라도 외국인 자본 유출은 감내할 수준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 한·미 금리차 확대... 환율 하락 요인

경기도에 동지를 둔 자동차 부품업체 B사는 요즘 미국이 금리를 올렸다는 소식에 한숨이 나온다. 이 회사의 영업담당 부사장은 "경험적으로 미국의 금리 인상 시기에 달러값이 하락했다. 예상대로라면 올해 장사도 손익분기점(BEP)을 맞추기가 쉽지 않아 보인다"고 걱정했다.

한·미 금리 역전에도 수출기업들은 주름살이 늘게 됐다. 통상 미국이 금리를 올리면 달러가 강세고 원하는 약세로 바뀐다. 하지만 현실은 따로 가고 있다. 트럼프가 '미국 우선주의 정책'을 쓰고 있어서다.

권구훈 골드만삭스 이코노미스트는 "미 금리인상이었던 2004년부터 2006년까지도 달러화 약세 완화 강세였다"며 "지금의 금리인상 기조가 유지될 경우 달러화가 강세를 보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이 연간 수출실적 50만달러 이상인 기업 514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수출기업의 경영 환경에 가장 큰 영향을 줄 이유로 '환율 변동 심화'(48.4%)를 첫 손가락에 꼽았다.

수출기업들은 보통 환율이 10% 하락하면 운송장비업의 영업이익률은 4%포인트, 전기전자산업은 3%포인트, 기계장비는 2.8%포인트 감소한다고 분석한다.

주력 수출품인 반도체, 자동차, 선박, 디스플레이, 스마트폰 등이 대부분 타격을 입는다는 의미다.

현대자동차그룹 산하 한국자동차산업 연구소에 따르면 원·달러 환율이 10원 하락할 경우 자동차업계 매출이 연간 4200억원 감소한다.

한·미 금리 차 확대도 걱정이다. 현대경제연구원은 한·미 간 단기 금리 차가

1%포인트 확대되면 원·달러 환율이 1.34%포인트 하락(원화값 상승)하는 것으로 추산했다.

이 연구원 박정용 연구원은 "외환 당국은 외환시장의 급격한 변동성에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시장과 소통을 강화해야 한다"며 "경제 펀더멘털 강화로 대외변수에도 안정적인 기초 체력을 유지해야 하고 기업은 환리스크 관리 역량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 1468조 가계부채... 고위험 가구 뺄까

서민들의 주름살도 늘게 됐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의 금리 인상 기조에 맞춰 맞춰 기준금리를 올리는 방향으로 마음을 바꿀 가능성이 있어서다. 금리가 오르면 1468조 규모의 가계부채 이자 상환 부담이 커진다. 전체 가계대출의 70%정도가 변동금리 대출이다.

통계청의 올해 가구 추계(1952만 가구를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가구당 가계부채는 7269만원, 가구당 늘어나는 이자 부담은 18만1725원이다.

문제는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이 무너질 수 있다는 점이다. 올 1분기 소득 하위 20%(1분위) 가계의 명목소득은 128만6700원으로 1년 전보다 8.0% 줄었다. 소득 하위 20~40%(2분위)인 가계 역시 4.0% 감소했다. 소득은 줄어드는데 대출금리가 올라 지출은 늘어나다 보니 상환능력이 부족한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연체가 발생하기 시작할 것이다.

한국은행은 지난 3월 금융안정보고서에서 3개 이상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저신용(7~10등급)이면서 저소득(하위 30%)인 취약차주의 대출이 지난해 말 12조7000억원으로 1년 전에 견줘 5000억원 늘었다고 집계했다.

/김문호 기자 kmh@metroseoul.co.kr

이주열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취약차주 부실화 우려도

(한국은행 총재)

韓·美 금리역전 폭 확대

한은, 통화금융대책반 회의 개최 "아르헨 등 신흥국 상황 지켜보아야"

미국 연방준비제도(Fed)가 13일(현지시간)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상(연 1.75~2.00%)하면서 우리나라(연 1.50%)와 금리차가 0.50%포인트로 확대됐다. 올 들어서만 지난 3월에 이은 두 번째 금리 인상이다. 특히 미 연준이 올 하반기에 또 다시 기준금리를 두 차례 추가 인상할 것으로 보이면서 우리나라의 경우 급격한 금리 상승에 따른 외국인 자본 유출 우려가 나온다.

한국은행은 14일 오전 미국의 금리 인상 결정에 따른 우리 금융과 실물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통화금융대책반 회의를 개최했다. 서울 중구 한은 본관에서 허진호 부총재보 주재로 진행된 이번 회의에선 유상대 부총재보, 한은 통화정책국장, 금융시장국장, 국제국장, 공보관, 투자운용1부장 등이 참석하여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의 결정이 국내의 금융시장에 주는 영향을 분석했다. 또 지난 12일 북미정상 회담에 따른 금융시장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방안도 논의했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14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으로 출근하고 있다. 이날 이 총재는 미국의 기준금리 인상이 국내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우려할 정도로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 "국내 금융시장 영향 제한적... 신흥국 위기 지켜볼 것"

이주열 한은 총재는 이날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 금리 인상은 국내 금융시장에 제한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일부 취약 신흥국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지켜보아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 부채 및 재정 적자에 시달리는 일부 취약국의 경우 미국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금융위기에 처할 수 있다는 전문가들의 분석이 제기된다.

이 총재는 "미국의 금리 인상 경로를 보여주는 점도표를 보면 올해 두 차례 더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졌다"면서 "시장에선 이를 매과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전혀

예상치 못했던 결과가 아니라고 받아들여 결과를 놓고 보면 차분한 분위기"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미국 시장에 준 영향도 제한적으로 나타난 만큼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우려할 만큼 크지 않고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 역시 이날 오전 고형권 기획재정부 1차관 주재로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거시경제금융회의를 열고 미 금리인상에 따른 글로벌 금융시장 동향 및 전망, 외화유동성 등을 점검했다. 회의에는 손병두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허진호 한은 부총재,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정구돈 국제금융센터 원장 등이 참석



관은 "미 금리 인상으로 향후 시장 변동성이 확대될 우려가 있고 특히 최근 아르헨트나, 터키, 브라질 등 일부 신흥국 금융 불안이 확산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우려했다.

◆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 취약계층 부실 우려

한편 국내 금융시장에선 미 금리 인상으로 은행 대출금리 상승세에 탄력이 붙었다는 전망이 나온다. 이에 따른 취약계층의 원리금 상환 부담이 가중되고 이들이 보유한 대출이 부실화돼 경제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지적이다.

실제 은행권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의 기준이 되는 코픽스(COPIX·자금조달비용지수) 금리는 신규 취급액 기준 지난 2016년 9월 1.31% 저점을 기록한 이후 올 4월 1.82%까지 올랐다. 미 금리 인상 시기와 부합한다. 지난달에는 1.79%로 주춤했으나 역대 최저치와 비교하면 여전히 0.48%포인트 높은 수준이다.

이처럼 시장금리가 오르면서 이를 기반으로 하는 은행권 대출금리는 지난해 9월 3.24%에서 올 4월 3.47%로 0.23%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대출금리 상승으로 차주 부담이 더욱 커졌다는 것이다.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계층부터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봉준 기자 bj35sea@